

CHINA WATCHING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Ajou China Policy Institute
亞洲大中國政策研究所

2019. 04. 22 <제25호>

미중 전략경쟁시기의 한중관계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소장

정책 제언

한중 지도자 간 신뢰구축과 전략대화 기제의 구축

- 중국 지도부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말의 과다나 지킬 수 없는 약속들보다는 신중하고 잘 조율된 인사 교환이 필요. 정치 지도자들의 중국에 대한 이해부족 현상이 일반적이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오히려 경험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다는 사고가 지배하고 있음
- 중견국으로서 한국의 4강 대사는 우리 최고 지도자의 입장 전달보다는 상대국의 입장을 정확히 파악하여 본국에 전달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인사 필요
- 미중 전략경쟁 시기 조급한 양자택일의 관점을 지양하고, 신중하게 상대방들의 변화를 관찰하면서, 내구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동시에 추진하여야 함
- 국회차원에서 중국 전인대와 정례 전략대화 추진
 - 국회의원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1.5 트랙의 전략대화. 민감한 정치적 현안 역시 공식 외교나 안보 라인보다 유연하게 논의할 수 있음
 - 이는 향후 미국이나 일본과 새로운 협력 모델이 될 수 있음

국회차원에서 중국 전인대와 정례 전략대화 추진

중국과 경제협력 강화와 지역 '이익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중국 설득. 이는 향후 한국 경제의 명운이 달림

- 한미동맹이 공고한 것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는 공동의 목표도 존재하지만, 한국이 미국의 시장 경제 모델을 모방하고 지원을 받아 경제적으로 크게 성공한 데 기반을 두고 있음
- 시장 경제의 논리에 의하면 점차 소원해지고 경쟁적이 되어 가는 한중 경제를 다시 새로운 경제 분업·협력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가가 관건임. 한국 정부는 중국 당국에 이러한 노력을 정치적으로 배가하도록 적극 요청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시점임
- 한중 관계의 중장기적 향배는 독자적인 가치 체인을 형성해가고 있는 중국과의 경제 협력과 "경제이익 공동체" 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가에 달려 있음
- 중국이 현재 적극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전략과 한국의 다양한 지역 전략구상을 접목하여 협력을 확대해나가는 새로운 단계의 협력을 추진해야 함
- 경제에 있어 지속적으로 "With China" 의 전략 방향 유지
- 환황해 지역협력 구상 추진. 국가 간 협력을 넘은 "지역민 생존 이익" 에 기초한 지역 이익공동체 추진

한중 관계의 중장기적 향배는 독자적인 가치 체인을 형성해 가고 있는 중국과의 경제 협력과 "경제이익 공동체" 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가에 달려 있음

향후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도 우리의 국익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중관계 3원칙을 유지할 것을 권고함

- 첫째, 상호존중하고, 소통과 협상을 통한 위기관리와 갈등 해결 원칙
- 둘째, 공동 번영 추구하고 동아시아 안정을 위한 전략적 협력 강화. 이를 위해 "이익공동체 형성" 에 대한 인식공유와 "새로운 한중 협력모델" 의 구상 필요
- 셋째,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상호 대화와 협력 강화

내용 분석

1. 한중 관계의 역사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의 채택은 기존 한중 관계에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킴

- 한중 관계를 냉전적 대립 구도에서 경제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협력적 패러다임으로 전환
- 한반도 안정에 더 큰 관심 불러일으킴
- 한중 국교를 수립하는 전략적 공간을 제공
- 그 결과 한중 관계는 점차 발전하여 1992년 우호협력관계-2003년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2008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2013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내실화에 합의
- 2016년 초 사드(THAAD)문제가 불거지기까지, 한중 관계의 역사는 1992년 수교 이후 국제 관계 사상 거의 전무후무할 정도로 급속도로 발전 “기적의 양자관계” 라 불림

한중관계 비약적 발전의 주요 동인

- 한중 교류의 역사적 유구성, 문화적 유사성, 지리적 인접성
- 국제 경제분업(GVC)체계에서 한중 경제 협력의 상호 필요성과 보완성
- 중국의 부상과정에서의 한국의 전략적 가치 점차 부각
- 북핵 문제에 대한 정책 수렴 현상
- 갈등의 관리 노력

박근혜 정부 시기 한중관계의 전개

- 박근혜 정부의 대외정책은 크게 북한 제3차 핵실험(2013.2) 이후와 제4차 핵(수소탄)실험(2016.1) 이후 시기로 대별이 됨
- 제3차 핵실험 이후 정부의 정책기조는 연미·화중·포북(聯美和中包北)이었다고 생각함
- 북한 제4차 핵실험을 계기로 1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도입 검토 발언, 7월 8일 사드 도입 결정으로 점차 큰 전환을 맞이하였음. 정책 결정 당시 안보 vs. 경제 구도의 논쟁은 “안보” 개념에 대한 편협한 사고와 “중국에 대한 무지” 의 결과임
- 이후 박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는 맹미·견중·압북(盟美牽中壓北)으로 전환

제3차 핵실험 이후 정부의 정책 기조는 연미·화중·포북(聯美和中包北)이었다고 생각함

이후 박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는 맹미·견중·압북(盟美牽中壓北)으로 전환

2. 문재인 정부 시기 한중관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시진핑 정부의 한국에 대한 호감과 기대치가 크게 높아졌음.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 이해찬 (전)총리를 포함한 두 그룹의 특사단을 파견하였고, 시진핑 주석은 파격적으로 이들을 맞이하고 환대

- 문재인 정부 출범 시, 대중 정책은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를 구현한다는 것이었음
- 북한에 대해서도 ‘흡수통일’ 정책이 아닌 ‘공존, 공동번영’ 에 기초한 평화적 통일 전략 추구하여 중국의 기대와 합치
- 한중 양국은 사드포대의 한국 배치 결정이후 16개월 만에 최초로 북경에서 한중 외교차관 전략 회의 개최(2017.6.20.)
- 불신 강화의 시작: 한중관계에 주름이 지기 시작한 것은 2017년 6월 문대통령의 방미에서부터 시작.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첫 한미정상 회담에서 ‘북핵의 위협에 대한’ 한미일 안보협력’ 을 강화하기로 서명
- 중국은 대북핵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대중국 견제 세력화’ 혹은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 로 인식
- 한국 신정부의 북방위원회와 남방위원회의 구성이 중국을 우회하기 위한 전략으로 인식하는 경향 강화

2017년 7월 6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사드문제를 중국의 핵심이익이라고 규정하고 한국에 대한 불만과 압박을 공개적으로 드러냄

- 이후 2017년 8월 한국의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의 불만이 크게 고조
- 2017년 10월 31일. 한중 양국은 관계 개선을 위해 사드 3 Nos(반핵, 반 군사조치, 반 정권교체) 원칙에 공감대를 형성: ▼사드 추가 배치 않는다. ▼MD에 편입하지 않는다. ▼한미일 군사동맹 발전 검토하지 않는다

2017년 7월 6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사드문제를 중국의 핵심이익이라고 규정하고 한국에 대한 불만과 압박을 공개적으로 드러냄

- 한국은 현재 사드 문제의 완전한 해소를 희망. 중국은 잠재된 분쟁 사안으로 인식
- 최근 한국정부가 사드 배치에 대한 환경평가에 착수하면서 다시 폭발성 있는 사드문제가 재연될 가능성 증대

한국은 현재 사드 문제의 완전한 해소를 희망. 중국은 잠재된 분쟁 사안으로 인식

최근 한국정부가 사드 배치에 대한 환경평가에 착수하면서 다시 폭발성 있는 사드문제가 재연될 가능성 증대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국 측이 중국을 배제하는 3자 혹은 4자의 종전 회담을 주장했다고 하는 중국 측의 인식으로 인해 한중 간 신뢰도가 다시 냉각. 당시 중국은 China-Passing 우려가 최고조에 달하였음

- 그 후 한중 간 정의용-양제츠 라인의 상호 소통을 통해 한중 갈등과 중국 측의 의구심을 크게 완화시켰으나 중국 측은 한국 문재인 정부의 전략방향이 '친미' 라는 의구심을 여전히 보유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한중 관계는 그간 상당한 진폭의 곡절(曲折)을 겪으면서 현재 외안내빈(外安內貧)의 상황이라 정의할 수 있음

- 국내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친중 정부라 비난하기도 하고, 일본이나 미국의 일부에서도 이에 동조
-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양국 간에 형성된 불신은 여전히 해소하지는 못한 상황임. 양국 (지도자들) 간에 사실상 불신이 강화되어 왔고, 점·선·면의 접촉에서 양국은 '점'의 측면에서 지극히 제한적인 전략적 소통 유지하면서 관계 관리
- 이러한 상황은 2017년 12월 14일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이 Low-Key로 진행된 데서 그 일면이 엿보였음. 이번 2018년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에서 여러 형식의 양자 정상회담 가운데 한중 정상회담은 불발

문-시 시기 북한/북핵 문제는 한중간에 여전히 이견과 불신 존재하나, 그 어느 때보다도 북핵과 한반도 문제의 처리에는 한중간에 원칙적인 입장이 접근

-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공존-공영-점진적 평화적 통일' 중시. 중국 시진핑 시기의 대한반도 정책과 그 어느 정부보다도 흡사한 측면이 존재.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놓고도 양국 간 인식 차는 근접할 개연성 다대. 양국은 인식 차이를 줄여나가면서 공동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

한중 간 관계개선과 협력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호 공감대가 형성

- 2017년 말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의 가능성 고조. 중국은 한반도 안정을 위해 한국은 물론 북한과도 상호 소통과 협력의 필요성 크게 인식. 한반도에서의 전쟁 방지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red-line임
- 중국은 한미일의 대중국 군사안보 협력 강화를 억지하고자 추구하고 있으며, 동시에 북중 관계가 냉전적인 특수협력관계로 인식(프레이밍)되는 상황을 회피하려 노력함
- 미중 전략경쟁의 강화로 한국의 지정학적, 지전략적 가치는 북한 못지않게 크게 증대되는 시점임.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 없이 북한과 유대를 강화하는 것은 냉전 프레임에 걸리고, 미중 전략경쟁에서 미국의 대중 압박에 대한 빌미를 제공하게 됨
-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 핵의 확산 방지 및 비핵화 추진은 국가이익의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함
- 2019년은 북중 국교 수립 70주년의 해임. 시진핑의 평양방문이 실무 논의중이며, 북중은 이를 계기로 관계강화의 조치를 취하려 할 것임. 다만, 상호 정책 우선순위가 달라, 순수 양자 관계 만으로는 북중 관계 발전이 제한적일 것임. 이는 북한이 최근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함
- 중국은 북한의 도발 방지와 비핵화 추진, 미국의 한반도 영향력 약화가 주관심이고, 북한은 핵을 보유한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적 지원 획득과 UN 제재 완화가 주 관심임

미중 전략경쟁의 강화로 한국의 지정학적, 지전략적 가치는 북한 못지않게 크게 증대되는 시점임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 핵의 확산 방지 및 비핵화 추진은 국가이익의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

현재 한중 관계에서 중국 관련 주요 갈등 사안은 표면화되고 있지 않으나, 향후 다가오는 도전이 엄중함

- 환경 평가 후 사드 문제의 재점화 가능성 다대
- 경제적 분리 현상의 가속화와 한국의 변연화. 중국은 더 이상 경제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황으로 변화중
- 이어도 수역/KADIZ를 둘러싼 갈등의 부상
- 미중 전략경쟁이 가열되면서 경제부문 조치도 한국에 양자택일적인 선택의 압력 심화 가능성 다대
- 미중은 북핵문제를 미중 전략경쟁의 하위 변수로 인식하면서 활용하려는 경향 증대. 북핵문제 해법에 대한 대안으로 북한은 중국과의 연대론 카드를 적극 고려중. 이 모든 사안들은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어렵게 할 것임
-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 증대와 미국이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를 위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동북아·서태평양 지역에 배치하려는 움직임 가시화 가능성 강화

3. 미중 전략 경쟁과 한국의 고려 사항

한국은 이제 미중 전략경쟁의 격화 혹은 냉전 2.0이라는 중장기적인 도전에 직면하여 새로운 외교·안보·경제·대북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한국은 이제 미중 전략경쟁의 격화 혹은 냉전 2.0이라는 중장기적인 도전에 직면하여 새로운 외교·안보·경제·대북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이 처한 구조적인 조건은 대륙과 해양사이에 놓인 지리적 공간
-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국가
- 자원 빈국으로서 무역을 통해 경제를 운용하는 무역국가임
- 분단국가로 군사적 대치상황이라는 것임.
- 새로운 광의의 안보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이 가운데에서도 상대적으로 소홀한 경제안보를 이제 국가 안보의 주요한 대상으로 놓고, 지정학, 지경학을 포괄하는 지전략적 안보 전략을 수립해야 함

향후 세계는 미중 전략경쟁의 결과로 '팍스아메리카' 나 '팍스시니카' 가 아닌 미중이라는 거대한 두 축을 중심으로 양분될 수도 있음

향후 세계는 미중 전략경쟁의 결과로 '팍스아메리카' 나 '팍스시니카' 가 아닌 미중이라는 거대한 두 축을 중심으로 양분될 수도 있음.

- 미중 전략경쟁이 점차 이념전쟁으로 격화되고, 사이버 정보 독점권을 두고 미중이 충돌하는 경우, 세계는 극단적으로 양극화 현상을 보일 수 있어 이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함
- 이 경우, 이들 간의 승패는 각자 세계를 구성할 내구 역량에 따라 결정될 것임. 이제 세계는 미중 경쟁은 일상화되고, 미중은 경쟁의 프리즘으로 세계를 바라볼 것임. 출서기도 강요당할 것 임
- 다만, 과거 냉전시기와 달리 미중은 서로를 말살하는 전쟁을 전제하지는 않음.
- 미중의 흡인력이 과거 미소의 흡인력에는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며, 여타 국가들은 당장 미중의 궤도에 올라타기보다는 스스로의 생존 전략을 고심할 것임

4. 미중 전략경쟁시기 한반도 관련 미중의 정책선호도와 한국의 대응

북한에 대해서는 "대항적 공존"을 위주로 하고, "비대항적(경쟁적) 공존"으로 진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함

미중 전략경쟁시기 미국은 다음과 같은 정책 우선 선호도를 가질 것임

- 최우선적인 선호는 어느 정도 핵을 보유한 친미적인 북한이 중국을 견제하는 구도임
- 차선이자 현실적인 방안은 북한의 핵보유를 중국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최대한 활용하는 것임.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핵무기 현대화, 동아시아 지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배치, 우주의 무기화 정책을 진행하는 자양분으로 삼는 것임. 일본에게도 그리 나쁜 선택은 아님. 다만, 북한과는 지속적인 압박과 소통을 통해 핵미사일이 미국을 직접 위협하는 상황은 최대한 억제하려는 전략을 쓸 것임
- 차차선은 동아시아 분할 방안임. 신냉전과 같은 상황 속에서 미국의 영향권과 생활권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필요시 일본의 핵무장론이 나올 수 있음. 이 경우 미국은 보다 완벽한 비핵화(FFVD)정책과 북한의 모든 재래식 위협을 망라한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철저히 제거한다는 정책을 고수하는 것임
- 최악은 한반도와 일본이 중국의 영향권으로 넘어가는 것임

주변 강대국에 대해서는 자강을 추구하는 "최소 억제전략"의 구현이 필요

중국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선호를 가질 것으로 예상함

- 최우선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 우위를 확보하고 생활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임.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친미화를 반드시 방지해야 하고, 동시에 의미 있는 수준까지 북한의 비핵화를 진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 차선은 동아시아 분할 방안임. 북한의 대중 종속화, 한국의 중립화, 일본의 북핵외교 수립을 추동하는 것임
- 차차선이자 현실적인 방안은 현상유지로, 미중 전략경쟁에 다른 변수가 작동하지 않게 하는 것임
- 최악은 동아시아·서태평양 지역에서의 대중 동맹 결속을 강화시켜주는 것임

향후 정세는 미국은 차선에서 차차선의 선택사이, 중국은 차차선에서 차선의 선택 사이를 오갈 것임

북한에 대해서는 대항적 공존-비대항적(경쟁적) 공존-협력적 공존-평화적 공존-평화적 통일의 관계 설정 가운데, 여전히 "대항적 공존"을 위주로 하고, "비대항적(경쟁적) 공존"으로 진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함

- 주변 강대국에 대해서는 자강을 추구하는 "최소 억제전략"의 구현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함

발행처: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발행인: 김흥규
 편집인: 서민혜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율곡관 527-2호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전화: 031-219-3861
 홈페이지: <http://cpi.ajou.ac.kr>

China Watching은 중국의 외교·안보 분야를 전문영역으로 하여 최신 현안을 분석하는 자료입니다.